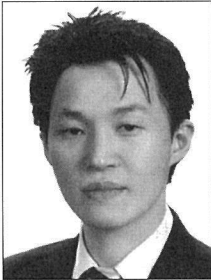


#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의 한계



배 정 식  
본회 지도부장

정부가 내세운 낙농부문 FTA 대책 핵심은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이다.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은 FTA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일정수준 보장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게 기본취지다. 지난 8월 농식품부는 가공원료유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였다. 낙농가의 경영안정과 계절편차에 의한 잉여원유를 가공원료유로 지원하여 국산 유제품 자급률을 도모하자는 것이 사업목적이다.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은 진흥회 낙농가 및 진흥회와 ‘원유수급안정 협약서’를 체결하고 진흥회가 배정한 수급목표량 범위 내에서 적정 생산량 유지 및 사후관리 점검자료 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해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전 낙농가 대상이지만 제도개편과 맞물린 상황에서 현재로선 낙농진흥회 농가만이 대상일 뿐이다.

낙농진흥회(농식품부)는 원유 잉여를 이유로 10월 1일부터 초과원유가격을 부활하였다. 구제역으로 우유가 모자라자 지난해 7월 1일부터 그동안 정상가격을 지급해 오던 것을 국제분유가격 기준인 512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여기에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으로 초과원유 중 정상가격 지급물량(기준원유량+버퍼)의 10% 범위 내에서 생산비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그동안 받아왔던 정상원유가격이 2011년도 통계청 생산비 수준인 718원 받는 꼴이 된 셈이다.

아직 대부분의 유업체들이 연말까지 정상가격을 지급하는 상황인데다, 지난해 유업체들보다 정상원유가격의 지급을 늦게 시행한 낙농진흥회 농가만 먼저 초과원유 가격제를 부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생산자 대표들은 계속해왔다. 구제역 이후 과다 부여된 공쿼터문제를 비롯하여 연간총량제 상한선 해제, 쿼터매매시 20% 귀속률 문제들은 낙농진흥회 차기 이사회에서 낙농선진화대책으로 별도 논의키로 한 상황이다.

애석하게도 농가 입장에서 보면 FTA 낙농핵심대책인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은 이상할 정도로 농가와 동떨어진 느낌이다. 낙농제도개편이 미비된 상황에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은 분명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낙농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쿼터를 초과해 생산하는 농가들은 생산비 수준이라도 보전 받는다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자기 쿼터도 생산하지 못하는 상당수 낙농가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본 쿼터도 다 짜지 못하는 상황에서 70%짜리 원유를 생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쿼터가 과부하 되어있는 상황이고, 우유가 남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은 자칫 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우려도 분명 있다.

그동안 정부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불용을 문제로 제기하며 낙농선진화대책을 종용해왔다. 공쿼터문제와 관련, 구제역 발생 이전 수준으로 쿼터를 묶겠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러나 공쿼터문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수그러들었고, 초과원유가격 부활과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내놓았다.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은 시작부터 한계를 분명히 안고 있다. 답은 정부나 낙농진흥회 중심의 사고체계가 아니라, 낙농가 생산자 중심의 사고체계 전환에 있다. ☹